

개 회 사

'23. 3. 27.(월) 09:30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거래소에도
감사드립니다.

II . 기업 M&A의 중요성

기업 M&A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만,

저는 M&A가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업은 M&A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 기업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
범위의 경제: 타 산업·품목 등 생산범위 확대에 따라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기업 M&A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기업간 M&A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M&A는 ‘경기회복’에도
도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근로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마모되는 등
경제성장 잠재력에 ‘영구적 충격’(permanent shock)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간 M&A를 통해
경제전반의 '회복력'(resiliency)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기업 M&A 지원을 위한 도전과제

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 M&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해 온 결과,
국내 M&A 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획기적인 규제개선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향후 정책방향

이러한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market driven)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하여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정부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월 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즉시 발표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참고
(‘23.3.27.,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V. 마무리말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간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유형의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일수록,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M&A제도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제고하는 제도인 만큼,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업(協業)'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민간과 정부를 아우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